

남북경협과 하나의 시장 구축방안: 외교·안보적 시각

정성윤 |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 yooni0411@daum.net

본고는 국제정치 외교안보 전공자 입장에서 동 주제에 대한 소견을 밝힌 것이며, 최근 한반도 정세와 동 주제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3가지 질문과 의견 제시로 구성되어 있다.

- 질문1) 현재 북핵문제는 어느 단계에 와 있는가?
- 질문2) 북핵문제 해결에 남북경협은 장애인가? 촉진제인가?
- 질문3) 남북경협에 대한 미국과 북한의 안보 전략적 속내는 무엇인가?

1. 현재 북핵문제는 어느 단계에 와 있는가?

2018년 12월 현재 북핵문제는 정체 상태에 있다. 2018년 6월 북미정상회담 이전은 양국의 상대에 대한 합리적 의심의 결여 등으로 합의에 대한 과잉 기대가 분출되었던 시기였다. 이는 남북미 3국의 정상들이 상대에 대한 값비싼 신호(costly signal)를 보내지 않고, 상대의 선의에 대한 과잉 해석에 따라 전략 환경을 평가했기 때문이다. 오랜 안보적 숙적 간에 생존 이슈에 대한 거래가 쉽게 타결될 것이라 단정하는 것은 희망적 사고이다. 북미정상회담 이후 양국 간 핵심 거래 이슈에 대한 입장과 조건이 내부적으로 정리되면서, 양국 간 협상게임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즉, 서로 간에 본격적으로 값비싼 신호를 주고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북미 양국의 2018년 정세형성 요인에 대한 해석의 차이, 주도권에 대한 자신감, 플랜B 보유로 인한 비타협 가능성 내재 등으로 인해 상대에 대한 높은 수준의 요구 등에 쉽게 굴복하거나 양복하는 정세를 단기간 내에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다. 아울러 현재의 북미 양국은 북한이 상대했던 과거의 미국과 다르고, 미국이 상대했던 과거의 불량국가들과

다르기 때문에, 협상 경로와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은 상당 기간 상존할 것이다. 결국 비핵화 거래의 등가성(equivalence)과 가역성(reversibility)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가 향후 북미 비핵화 협상의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 북핵문제 해결에 남북경협은 장애인가? 촉진제인가?

북핵문제의 진전 없이는 남북경협이 본격 가동될 수 없는 상황과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이는 미국의 전략과 이익에 반해 한국이 적극적인 대북 경제 관여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이 남북한 평화프로세스와 북미 비핵화 프로세스의 병행 혹은 선순환 관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남북경협 문제는 한국의 전략 추진에 다음과 같은 도전요인을 파생시킬 가능성이 있다. 첫째, 한미간 대북제재 공조 체제에 대한 균열 가능성, 둘째, 북한의 대남 전략적 가치의 재평가 가능성, 셋째, 대북정책에 대한 남남 갈등 및 지지 세력의 이완 등이 그것이다. 구조적으로 북핵문제 해결이 남북경협 추진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은 비교적 자명하나, 남북경협 추진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후호적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 다만, 북한이 남한에 대한 현물 및 현금 지원과 같은 지나친 요구를 자제하고, 대북제재의 균열을 남북경협을 통해 확보하고자 하는 인상을 야기하지 않는 경우,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연동된 남북경협 진전을 남한정부와 합의하여 남북경협이 북핵문제 해결에 일정정도 순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희망할 수 있다.

3. 남북경협에 대한 미국과 북한의 안보 전략적 속내는 무엇인가?

현재 북미관계는 상호강압(mutual coercion) 상태이다. 따라서 각자가 상대의 전략과 의지, 정책결정 내용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다양한 강압책과 메커니즘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미국은 경제제재를 비롯한 압도적 힘의 우위를 통해, 북한은 미국의 전략적 이해를 자극할 수 있는 증강된 핵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정세를 각각 주도하고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양국 모두 시간은 자신들의 편이며, 협상이 좌초되더라도 크게 손해 볼 것이 없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경제제재 및 정치·외교적 강압으로 북한이 대화에 복귀했다고 인식한다. 따라서 미국은 경제제재를 자신들의 효과적인 대북 압박점(pressure point)이자, 북한의 전략적 취약점이라 평가한다. 따라서 북한이 경제제재 해제에 대해 과다하게 민감하거나 남북경협 문제에 지나치게 집착할수록, 미국은 이를 북한을

압박하는 강압메커니즘으로 활용하려 할 것이다. 즉, 북한에 대한 요구 수준을 낮추어 협력 성과를 창출하기 보다, 자신들이 정한 방식과 내용으로 북한이 협력하지 않을 경우 경제적 압박 수위를 높일 것이다. 그리고 이는 미국의 대북전략의 요체가 될 것이다. 따라서 최근 북한이 대북제재와 관련해 이를 교환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는 전략적 패착이다. 그리고 이는 남북경협을 추진하고자 하는 한국에 대한 대미 간섭과 견제를 강화시키는 역효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높다.